

민주, 野 '정통성 흔들기' 공격 차단

“대통령 끌어 들이지 말라”

국정원 댓글조작과 상황 달라 윤석열,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판결 관련, 야권의 현 정권 공격을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며 “김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믿었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벌여 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질라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대통령과) 연결해 사과까지 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지자들이 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다 사과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모여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

해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권 탄압을 받아 좌천됐던 분이 윤 전 총장이었다”며 “아무리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윤 전 총장의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접대 의혹, ‘주 120시간 근무’·‘대구 민란’ 발언 등을 싸잡아 “최근 제기된 의혹과 발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역감정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문제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항간에 ‘윤석열이 두 번 더 술직했다’는 국민 혈암만 더 오르겠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낙연 ‘노무현 탄핵’ 참여 논란

민주당 경선전이 이점투구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사진들을 보니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니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2004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 이낙연 의원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 12일 새벽 다른 야당 의원들과 분회의장에 전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나서 193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단 두 사람이었다. 무기명 투표라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새천년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눈총을 받았다. 반대표를 던진 다른 한 의원은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으로 지목됐다.

이낙연 의원은 당시 드러내놓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광주·전남 국회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표결 강행하려 해놓고 반대표 던졌더니...”
이낙연 “반대표 던졌다” 기자회견서 몇 차례 시사

고, 오전 투표 때는 의장석 보호를 위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스크림까지 썼다”고 전했다. 당시 중앙일보에 “이낙연 의원은 탄핵안 찬반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당시) 나는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지켰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그 쪽에 계셨으니 내부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해 이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을 은근히 겨냥했다. 김두관 의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트릭 선수”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국회 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변인으로 활약하는 등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열린우리당 분당에 함께하지 않고 민주당에 전류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당시 이 후보가 당론과 달리 탄핵안에 반대 투표를 했고,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시에도 보도됐다”며 “이재명 후보 측이 탄핵 프레임에 덧씌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이 의원이 노 대통령 탄핵에 반대 표를 던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면서 “오히려 당시 이 의원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2차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과 여야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막판 줄다리기

추경안 오늘 본회의... 민주, 野 협조 않으면 결단 불가피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의 이행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어제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추경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 방향에는 여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다만 재정요건을 고려, 추경안을 순증하기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산자위 합의에 우선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원내지도부는 추경 원안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명시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여야간 협의가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가져온 80% 지급안을 여론에 떠밀려 100%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네거티브 앞장서는 두 후보, 집에 가라”

박용진, 도의회 기자단 간담회 이낙연·이재명 싸잡아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박용진(50) 의원은 22일 “네거티브에 앞장서는 두 후보, 그분들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 그 자체다. 이렇게 계속할 거면 집에 가시라”며 여권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낙연·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사생활 문제, 군필 원천 이런 식으로 상대를 흠집 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는 캠프 책임도 아니고 모두 후보들 책임”이라며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다. 먹고 사는 겨랑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런 공격이 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같이 마시는 우물에 독을 푸는 격”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재집권에 어떻게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정책 검증으로의 태세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농 불균형 해소, 농촌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촌 문제만이 아니라 지나친 수도권 인구과밀, 인구집중 현상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도시사나 광역시장들이 수시로 서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자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계획과 프로젝트가 있어도 재정적 권한이 없고, 행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말만 지방 자치고, 지방 분권이 지실 제 광역 시도지사까지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우리 지역 이렇게 혁신 만들겠다고 브리핑하는 일은 새삼 창피한 일”이라며 “지방 분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